

# 정책금융의 현황과 발전과제

# 목 차

I | 정책금융의 정의 및 역할

II | 정책금융의 규모

III | 정책금융의 유형 및 진화

IV | 미래 정책금융의 설계



## I | 정책금융의 정의 및 역할

### ◆ 정책금융에 대한 다양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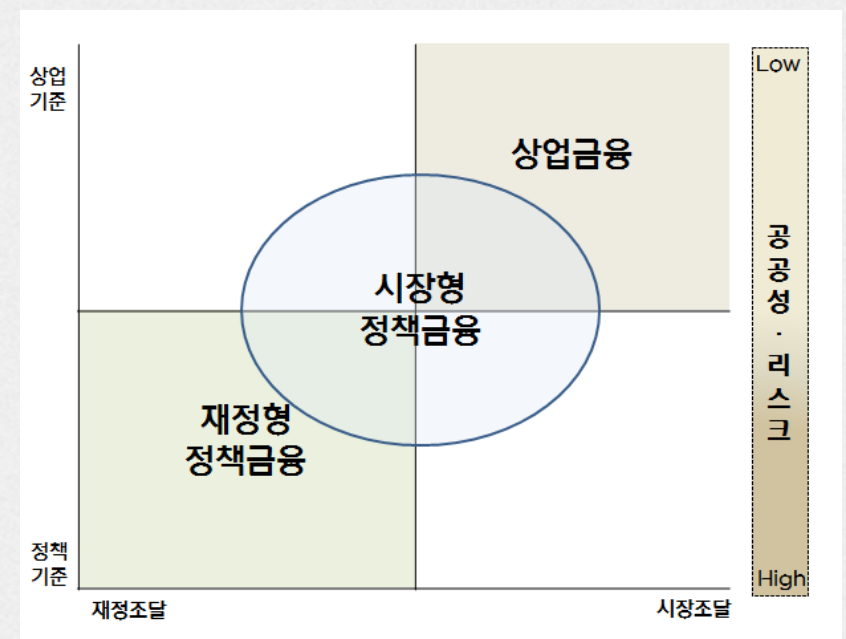
- (전통적 정의) 우대적 금융지원(보조금) 측면 또는 특정산업에서 선별적 자금지원 강조
- (최근의 정의) 상업적 원리로 충족되지 못하는 금융수요를 보완하는 공공적 성격 강조  
→ 공공성과 리스크를 기준으로 시장실패 영역 확대
- (본 연구) 정부출자 등으로 설립된 기관이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금의 중개, 리스크의 선별기능 등 금융의 기능을 통하여 자금 및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 < 정책금융의 분류 >

### ◆ 정책금융의 분류

: 자금조달과 운용기준에 따라 분류를 시도함

- **(재정형 정책금융)** 재원을 정부재정에 의존,  
정책형 업무 위주로 영업  
ex. 중진공, 한국벤처투자,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 **(시장형 정책금융)** 재원을 자체수익과 금융시장에 의존,  
정책형 업무와 상업업무를 병행  
ex. 산은, 기은 등



자료 : 정책금융연구회



### ① 시장실패 보완

-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경제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기능 수행
- 공공성은 크지만 적정이익이 수반되지 않거나, 대규모·장기자금이 과소공급되는 분야

### ② 시장선도

- 새로운 금융수요가 발생해도 리스크가 높고 수익성 측정이 어려워  
상업금융의 참여가 저조한 분야에서는 정책금융의 시장선도 필요(금융시장의 First Mover)

#### ※ 사례 (독일 KfW)

- 연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 정책에 부응하여 녹색금융 확대
- 특수목적채권인 그린본드를 재원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지원  
(녹색기후금융 관련 사업이 2015년 신규 약정액의 약 38% 차지)

### ③ 시장안정

- 금융위기 때와 같이 민간금융의 과도한 리스크 축소 등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자금공급으로 금융 및 실물경제에 영향 최소화

#### ※ 사례

- (독일 KfW) '08년 금융위기 이후 KfW Special Program을 통해 유동성 위기기업 운전자금 지원
- (일본 JFC) 금융시장 혼란시 자금공급을 늘리는 위기대응원활화업무 운용

# 정책금융 역할의 변화 및 최근 동향

## I. 정책금융의 정의 및 역할

- ◆ 정책금융 역할의 변화 : 구체적인 역할과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정책금융의 중요성도 경제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확대**를 거듭하여 옴

구분		'50s~'70s	'80s	'90s	'00s ~
해외	중요역할	경제개발	사회발전	사회발전	경기대응
	방향	확대	조정 (민영화)	축소 (민영화)	확대
		↗	→	↘	↗
	관점	Development view	Social view Political view	Social view Political view	Macroeconomic view
우리나라	중요역할	개발금융, 장기산업금융	장기산업금융	시장안정	시장안정, 신성장동력발굴, 통일금융
	비고	-	민영화 (외환)	민영화 (국민,주택,기은*) *지분일부매각	정책금융 효율화

### ◆ 최근 동향 : 산업정책 및 정책금융의 중요성 대두

-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창출하는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 대두
- Stiglitz, Mazzucato 등은 투자성과가 불확실한 분야에서 정부개입과 산업정책 부활의 필요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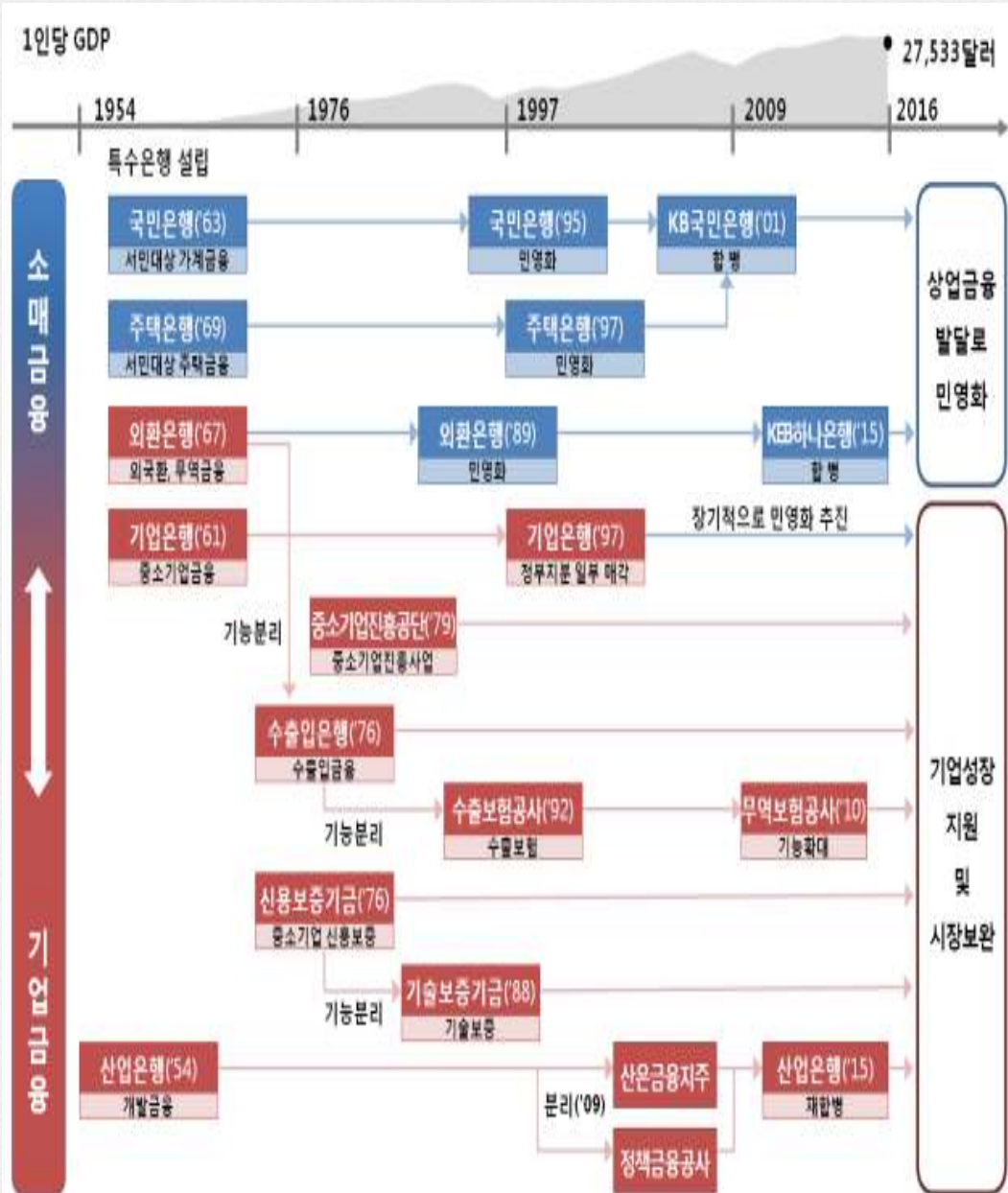


## II | 정책금융의 규모

# 정책금융의 발전과정 및 공급체계

## II. 정책금융의 규모

### ◆ 우리나라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발전과정



### ◆ 우리나라 정책금융 공급체계

구분	기관	주요 업무
정부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마케팅 지원
중앙 은행	한국은행	화폐발행,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진행, 대출정책(금융중개지원 대출 등)
국책 은행	산업은행	기업금융(대출·투자·보증), PF, 벤처투자, 간접투자, 온렌딩, 자본시장업무(회사채 주선, M&A, PEF), 기업구조조정
	수출입은행	수출입금융, 해외투자자금대출, 수출입·해외사업금융·대출기업 앞 보증 등
	기업은행	중소기업금융(대출·투자·보증), 가계금융 등
	장기적으로 민영화 추진	
보증 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기본재산관리, 보증연계투자 등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기술평가·인증, 보증연계투자 등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대외채권 추심 등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대상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등
	기능분리 수출보험공사(92) 수출보험	무역보험공사(10) 기능확대
투자 기관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
기타 기관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대출, 주택금융 신용보증, 주택 연금, 유동화증권발행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



# 우리나라 정책금융 규모

## II. 정책금융의 규모

◆ 경제발전의 주된 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정책금융에 한정하여 정책금융 규모 산출

◆ 우리나라 정책금융 규모(자금공급기준) : '16년 GDP대비 19.0%

(단위 : 조원, %)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3.6	3.7	3.3	4.2	4.6
한국은행		9.0	12.0	15.0	20.0	25.0
국책은행	산업은행	42.6	46.9	61.8	67.6	61.7
	수출입은행	72.2	76.7	80.4	82.7	70.5
	기업은행	51.4	53.7	59.0	67.0	59.4
보증 보험 기관	신용보증기금	42.5	44.7	45.3	45.9	46.1
	기술보증기금	18.1	19.7	20.1	21.0	21.6
	무역보험공사	23.8	22.1	19.3	17.5	16.0
투자기관	한국벤처투자	0.3	0.6	0.5	0.6	0.6
	한국성장금융 투 자운용	-	-	0.6	0.7	0.6
정책금융 합계		263.5	280.1	305.3	327.2	306.1
국내 명목GDP		1377.5	1429.4	1486.1	1558.6	1613.1
정책금융 합계/ 국내 명목GDP		19.1	19.6	20.5	21.0	19.0

주 : 수출입은행은 보증 포함

자료 : 각 기관,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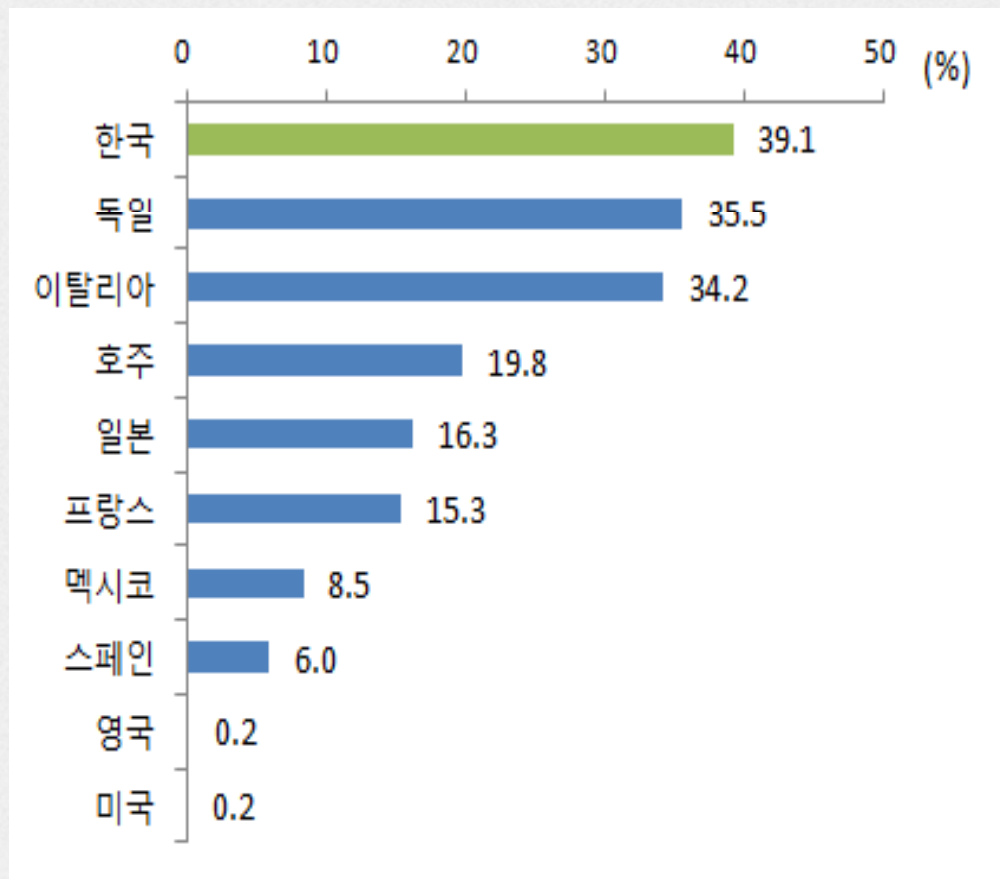
# 국가별 정책금융 규모 ① 횡단면 비교

## II. 정책금융의 규모

◆ 실물·금융발전 수준 대비 국내 정부소유은행 규모는 다소 큰 편

- GDP대비 국내 정부소유은행 자산비중은 39.1%로 OECD국가평균(25.1%) 대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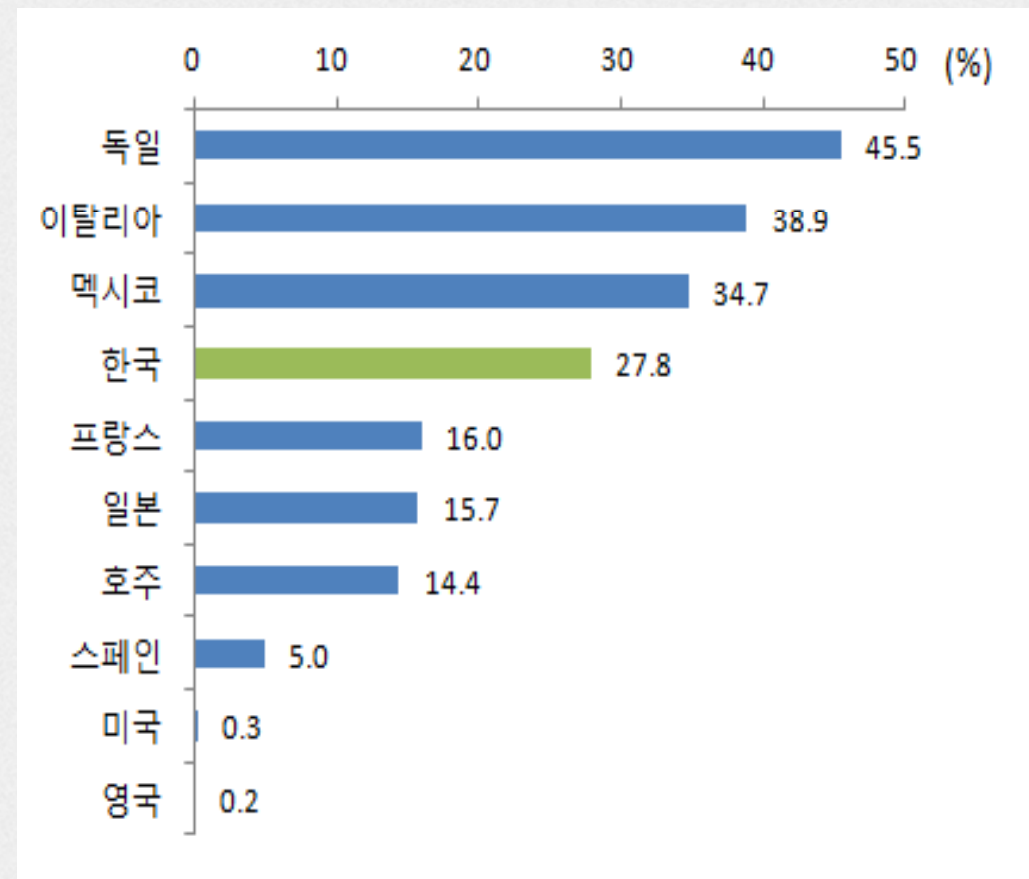
### <GDP대비 정부소유은행 자산 비중('15)>



자료 : Orbis

◆ 은행산업 규모에 대비한 비중은 27.8%로 OECD 국가 평균(29.6%)을 소폭 하회

### <은행산업 대비 정부소유은행 자산 비중('15)>



자료 : World Bank, Or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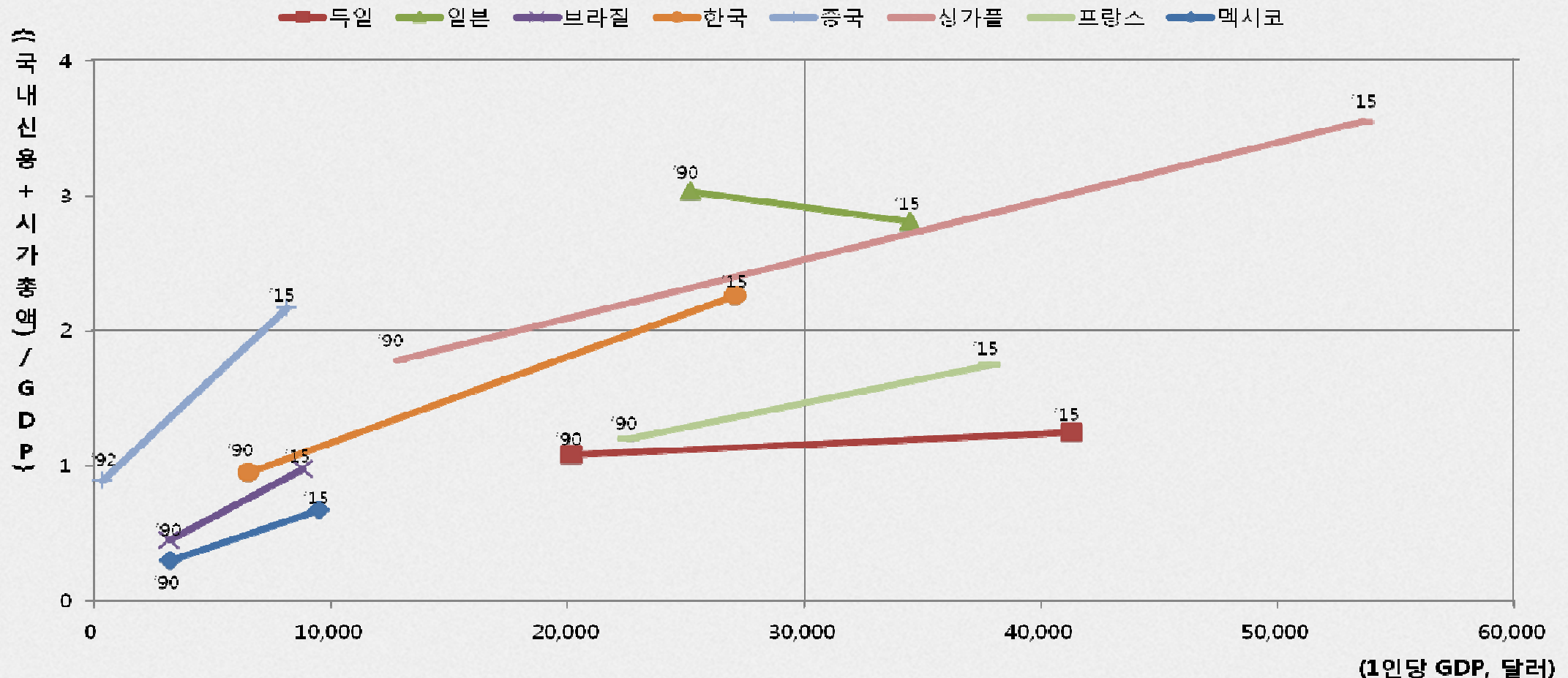


# 국가별 정책금융 규모 ② 시계열 비교

## II. 정책금융의 규모

### ◆ 국가별 실물·금융발전 경로

- 대체적으로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발전경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중국, 브라질 등 경제성장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과거 개발과정에서 금융부문이 빠른 속도로 발전
-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일수록 양(+)의 관계가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음



자료 : World Bank

# 국가별 정책금융 규모 ③ 시계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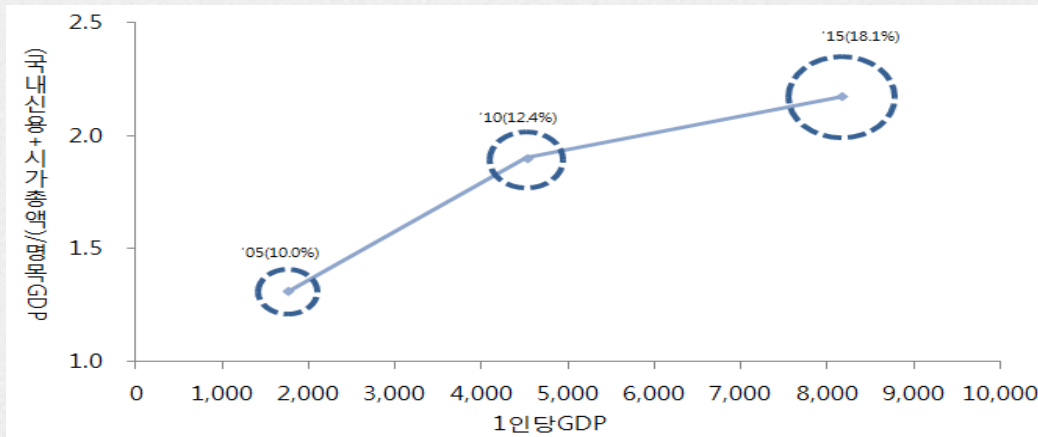
## II. 정책금융의 규모

### ◆ 실물·금융발전 경로상 정책금융 규모(대표기관 자산기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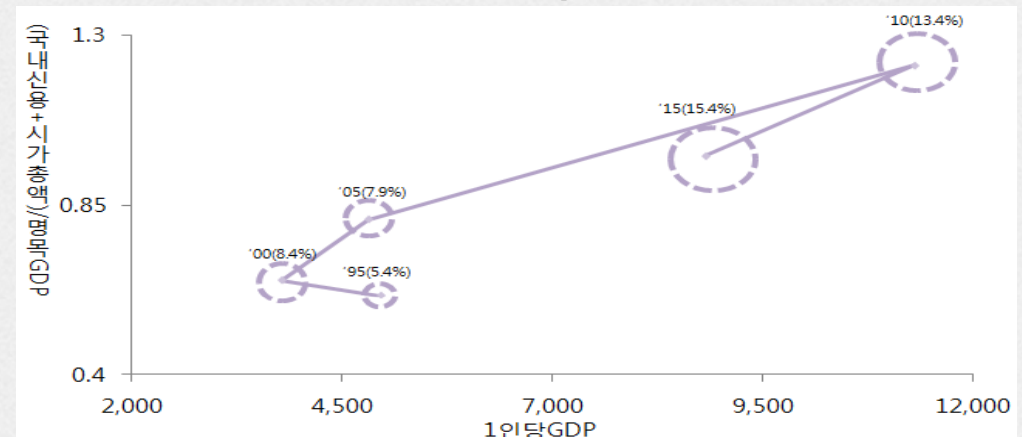
- (개발도상국·한국) '15년 기준으로 정책금융 규모는 대체로 GDP대비 10%를 상회하며 증가세 유지

\* 원의 크기는 대표 정책금융기관의 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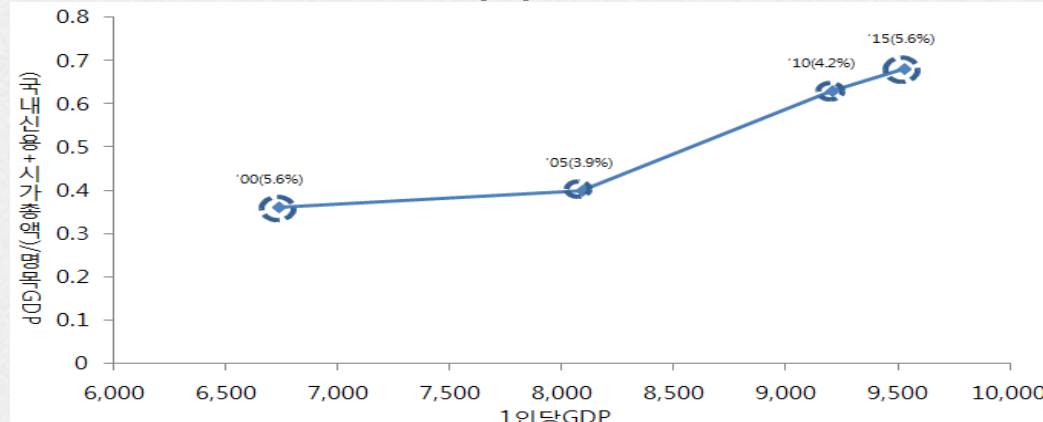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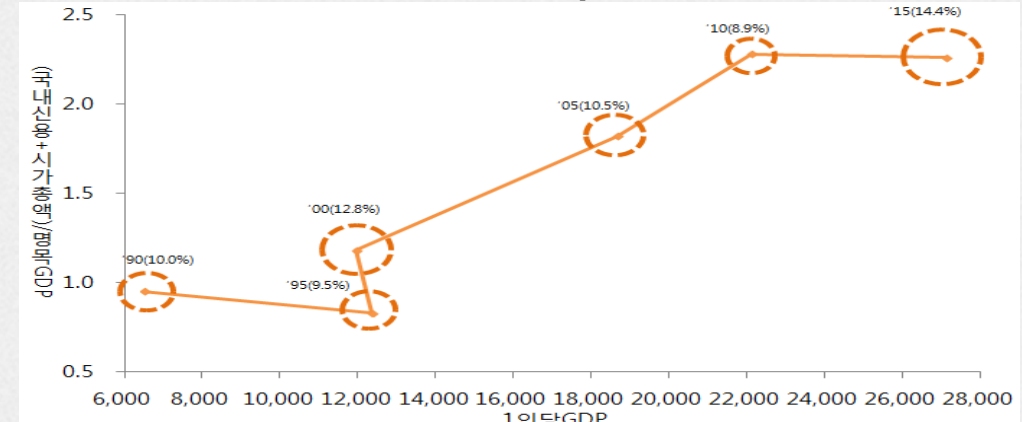
브라질



멕시코



한국



자료 : IMF, 국가별 대표기관 IR

(대표기관 : 중국 CDB, 브라질 BNDES, 멕시코 BANOBRAS·NAFIN, 한국 KDB, 독일 KfW, 프랑스 CDC·BPI, 싱가포르 DBS, 일본 JFC·DBJ)



# 국가별 정책금융 규모 ④ 시계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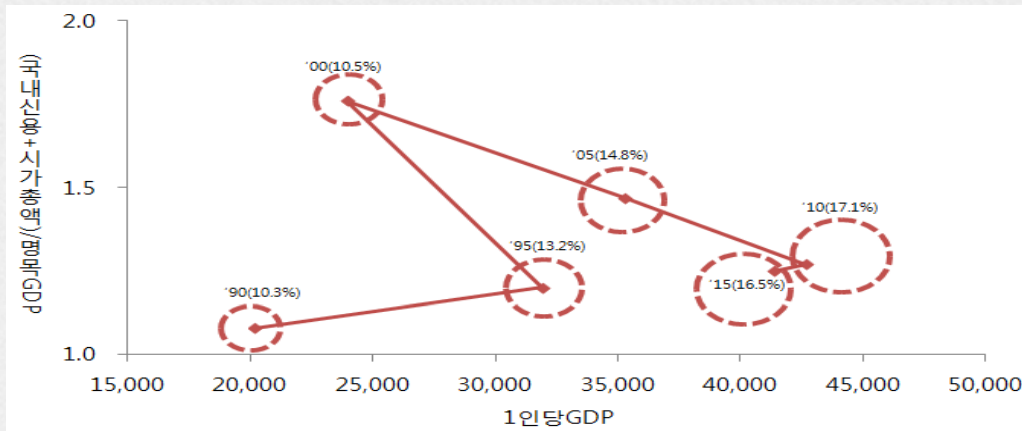
## II. 정책금융의 규모

### ◆ 실물·금융발전 경로상 정책금융 규모(대표기관 자산기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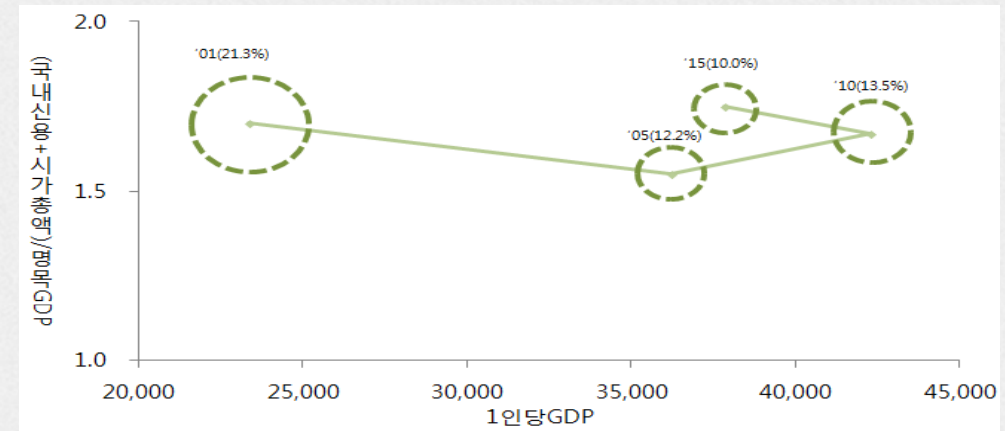
- (선진국) 개도국과 달리 일관된 경향성은 없으며, 국가별 발전경로상 차이에 따라 정책금융 규모 상이

\* 원의 크기는 대표 정책금융기관의 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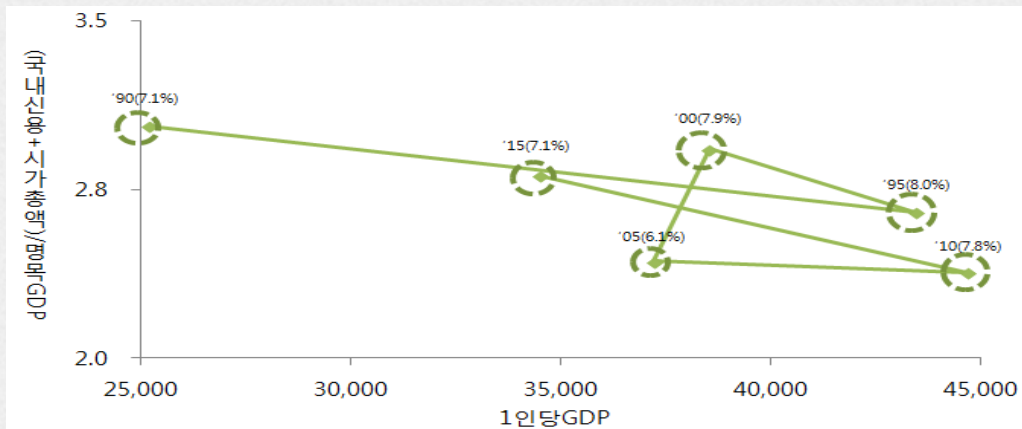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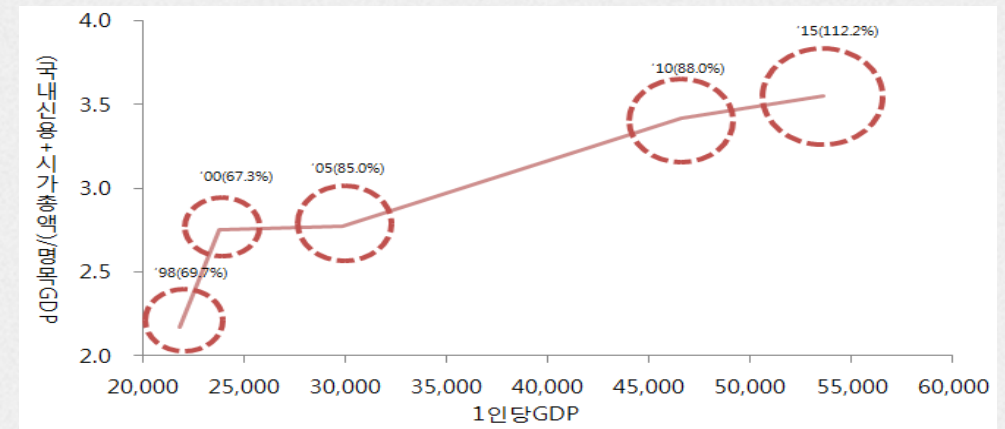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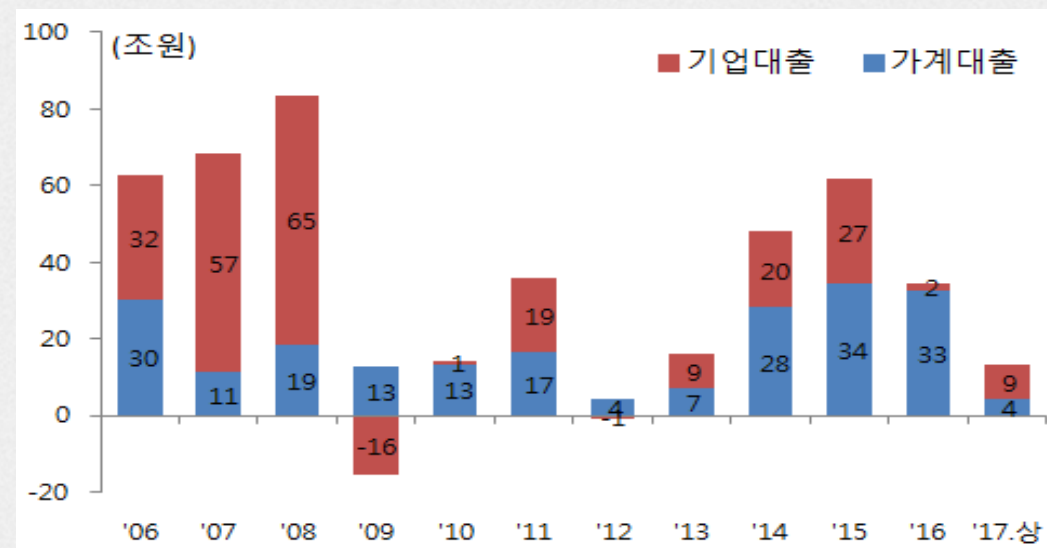


자료 : IMF, 국가별 대표기관 IR

(대표기관 : 중국 CDB, 브라질 BNDES, 멕시코 BANOBRAS·NAFIN, 한국 KDB, 독일 KfW, 프랑스 CDC·BPI, 싱가포르 DBS, 일본 JFC·DB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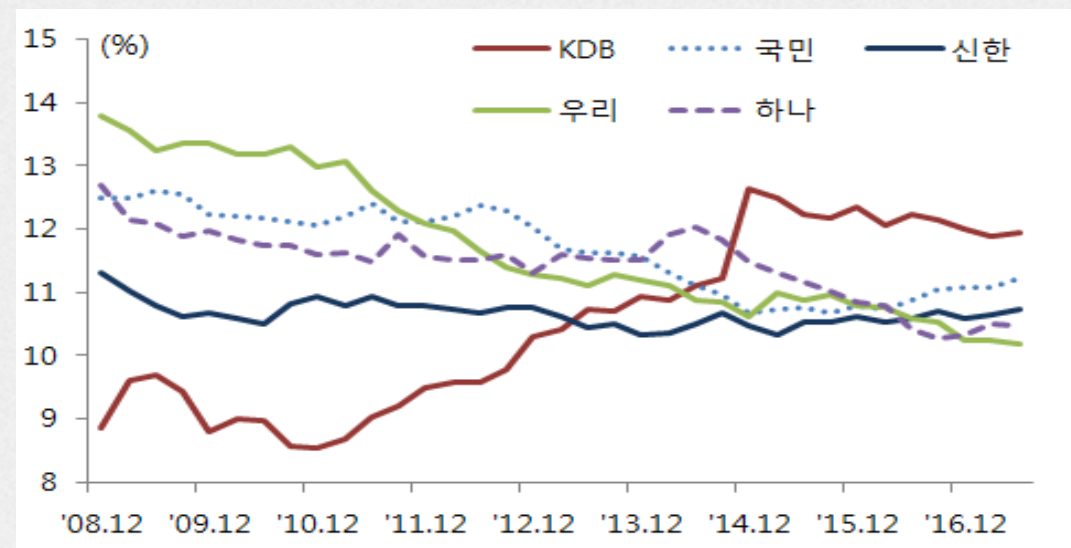
- ◆ **실물·금융발전에 따른 정책금융 규모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개발도상국 저개발시기(1인당 GDP 약 1.2만달러 이하)에 정책금융 규모 대체적으로 증가
  - 선진국 실물경제가 일정시점(1인당 GDP 약 2만달러)을 지나게 되면 정책금융 규모는 국가별 경제 및 금융환경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임
- ◆ **정책금융 규모는 국가별 경제·금융환경, 미래정책금융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더불어 정책금융의 질적 성장 및 효율성 추구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 **특히,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의 기업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실물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필요**
  - 기업금융시장내 Financing Gap을 민간 상업금융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분석 필요

시중은행의 차주별 대출 순증액 추이



주 : 외화대출은 모두 기업대출로 간주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별 기업대출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III | 정책금융의 유형 및 진화

- ◆ 금융시스템이 정책금융을 제약함에 따라 정책금융은 금융시스템이 은행중심인 기관중심형(독일·일본)과 시장중심형(미국)으로 구분
- ◆ 은행중심형인 독일, 일본에서는 정책금융과 특수은행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며, 시장중심형인 미국, 영국 등은 정부가 직접 정책금융을 구현
  - (미국) 시장중심 금융체계의 대표적인 국가로 정책금융 운용과정에서도 독일·일본과 다른 특징 보유
  - (독일) 오랜 정책금융 역사와 성공적 정책금융 운영사례 보유
  - (일본)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보유하였으나, 최근 통폐합 과정에서 정책금융에 대한 논란을 겪고 있음

정책금융기능	한국	미국	독일	일본	기타
경제개발 (R&D, 산업정책)	산업은행	-	KfW	DBJ	CDC(프)
중소기업지원	기업은행, 중진공 등	중소기업청 (SBA)	KfW Mittelstandsbank	JFC(Small and Medium Enterprise Unit)	Bpifrance(프), British Business Bank(영)
대외정책금융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US EXIM)	KfW Entwicklungsbank, KfW IPEX-Bank, DEG, Euler Hermes	JFC, JBIC, Japan Int'l Cooperation Agency	Agence Francaise de Developpement(프)

# 주요국 정책금융의 진화

## III. 정책금융의 유형 및 진화

### ◆ 독일(KfW)

구 분	역 할
1948~1953	전후복구 지원
1953~1960	성장기반 조성
1960~1970	대외원조 수행
1970~1980	국내경제 진흥지원
1980~1990	대외원조 고도화
1990~2000	통독이후 동독재건
2000~2007	개발금융 업무확대, 중소기업 금융강화

자료 : KfW Financial Report

### ◆ 일본(DBJ)

구 분	역 할
1951~1955	전후복구 및 중요산업 육성
1955~1965	산업적 성장기반 육성
1966~1984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사회문제 해결
1985~1995	산업적 변화대응
1996~1999	환경개선·벤처지원
1999~2008	지역개발, 환경보전, 신기술 지원
2008~현재	위기대응업무

자료 : DBJ Annual Report

### ◆ 싱가포르(DBS)

구 분	역 할
1960~1970년대	제조업, 관광사업, 정부의 도시개발사업, 군수사업 등 지원
1980년대	상업은행 업무 본격 수행 및 민영화 진행
1990년대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 내 은행 인수로 영업기반 확충
2000년대~현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인수합병

자료 : DBS Annual Report



### ◆ (경로의존성) 정책금융 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경제·역사적 진화의 산물로서 상이한 경로를 따라 발전

- 각국은 다양한 형태로 정책금융구조를 지니는데,

- ① 독일은 단일 기관중심의 정책금융,
- ② 일본은 다수의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정책금융,
- ③ 미국은 정책금융 역시 시장중심으로 민간에서 운영되며, 특수한 분야에 한해서 정책금융기관 운영



⇒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국가마다 최적구조가 상이하므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역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우선 고려 필요

### ◆ (수요의 시간적 가변성) 정책금융 수요는 시대별 경제·금융여건, 경제발전 단계, 정부 산업정책 기조, 사회적 수요 등에 따라 주요 역할이 변화해 왔음

- (일본) ① 중요산업 육성, SOC건설 지원 등 → ②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등
- (독일) ① 전후복구 지원 → ② 중소기업·수출제조업 지원 → ③ 대외원조, 통일금융 → ④ 녹색기후금융



⇒ 선진국에서도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금융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존속 및 역할 수행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방향 설계시 향후 경제·금융·정치·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감안 필요

### ◆ (상업금융과의 관계) 정책금융에 따른 시장마찰 해결을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방법 수행

- ①독일은 기존의 정책금융 체계는 유지하면서 시장마찰이 우려가 되는 부문은 자회사로 분리
- ②일본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의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하고 일부 정책금융기관은 민영화



⇒ 정책금융의 역할과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역할을 조정해야 하며, 경제 및 상업금융의 발전정도, 정책금융이 맡고 있는 역할 등을 감안하여 시장마찰 최소화 방안 모색 필요



## **IV | 미래 정책금융의 설계**



### 정책금융의 현 위치

- 정책금융은 실물부문을 지원하며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의 한 부분을 차지
- 정책금융규모의 과다 여부는 금융제도 및 시스템, 민간역량, 정책금융의 경로의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

### 기능

시장실패 보완

#### 시장선도

새로운 금융수요 발굴  
금융시장 발전

#### 시장안정

금융위기 전후 민간금융  
한계 극복 차원

미래 정책금융의 수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비판적 이슈에 대해 고찰하며 미래방향을 설정할 필요

### ① 비효율성

#### ◆ 정책금융기관간 기능 및 업무중복에 따른 과다지원

- (규모의 과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대출 대비 정책금융 비중은 12.2%
  - (특정부문 집중) 우량·한계중소기업에 정책금융 지원 집중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야기
- 정책금융의 질적 성장, 기능 및 업무중복 해소, 맞춤형 지원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요구

<국가별 중소기업 정책금융 비중(2014년 기준)>



### ② 시장마찰

- ◆ 민간금융의 성장에 따라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 경쟁이 확대되며 시장마찰 논란 심화
  - 회사채발행시장, PF금융,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업무, 파생상품 업무 등
  - 민간금융기관 비중이 확대되는 분야에서는 공존 도모 필요 (회사채발행시장, PF금융 등)
  - 시장활성화가 미흡한 분야에서는 시장보완 및 선도역할 수행 필요(글로벌 PF, 벤처투자 등)

### ③ 정책목표 부재

- ◆ 불명확한 정책금융 목표는 자원의 전략적 배분 저해 및 정책목표 달성의 비효율 야기
- ◆ 정책자금 흐름에 관한 일관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미흡으로 정책금융 집중·중복 및 연계성 미흡
  - 명시적 정책목표 제시 및 정책지원 컨트롤 타워 시스템 구축 필요

비판 극복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선도적 대응체제 구축

- 글로벌 저성장환경 지속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비
-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경쟁력 회복 등 차원에서 선도적 대응체제 구축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 환경변화, 통일 금융 등에 대응

### 정책금융기관별 체계적 접근

- 재정과 금융기능의 비중에 따라 재정형, 기금관리형, 시장형 분류
- 시장형 기관의 경우 시장감독기준 적용, 시장관행 및 가격원칙 채택, 자율성 부여가 필요

###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징과 상업금융 발전 정도 감안

- 타국과는 상이한 정책금융의 태동 배경과 성장과정 고려
- 민간금융의 발전정도와 중장기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종합적 접근 필요
- 한국의 상황에 맞는 미래 정책금융 발전경로 모색

### 정책금융 선진화를 통해 비판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

- 기능측면에서 주어진 역할로서의 정책목적 달성
- 운영측면에서 공적자금의 성격상 요구되는 효율성 확보
- 정책금융 관련 비판이슈 극복

### 통상마찰 대비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조 속에서, 특히 시장형 기관의 경우 통상 마찰 이슈가 정책금융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

### 미래 정책금융 수요 개관

- ◆ 향후 경제·금융 변화를 감안할 때, 미래정책금융 수요는 ①미래혁신성장동력 육성, ②해외진출·통일금융, ③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④산업 구조조정에서 발생할 전망
- 일반적인 기업금융 뿐 아니라 특수금융, 투자금융 등 다양한 상품들로 이들 수요에 대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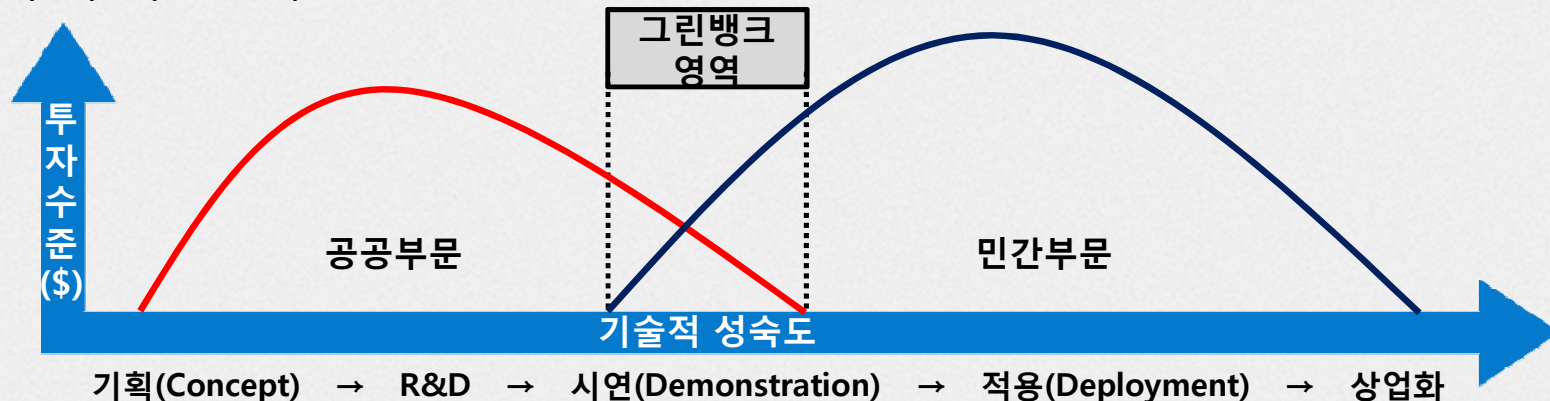


### 상업금융과의 공존 모색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상업금융의 역할도 필요함을 고려

#### ◆ 정책금융의 crowd-in 역할(민간자본의 후속 투자 유도)

- ① 산업과 기업이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할수 있도록 민간자본 선도
- ② 해외 신시장 개척을 선도하여 한국금융의 외연 확대
- ③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금융 확대
- ④ 통일시 중추적 역할을 수행



자료: kennan, H., "State Green Banks for Clean Energy," Working Paper, Energy Innovation, 2014

#### ◆ 민간금융의 정부재정 부담 완화

- 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지원
- ② 사업재편 등 정부가 추진하는 선제적 산업구조조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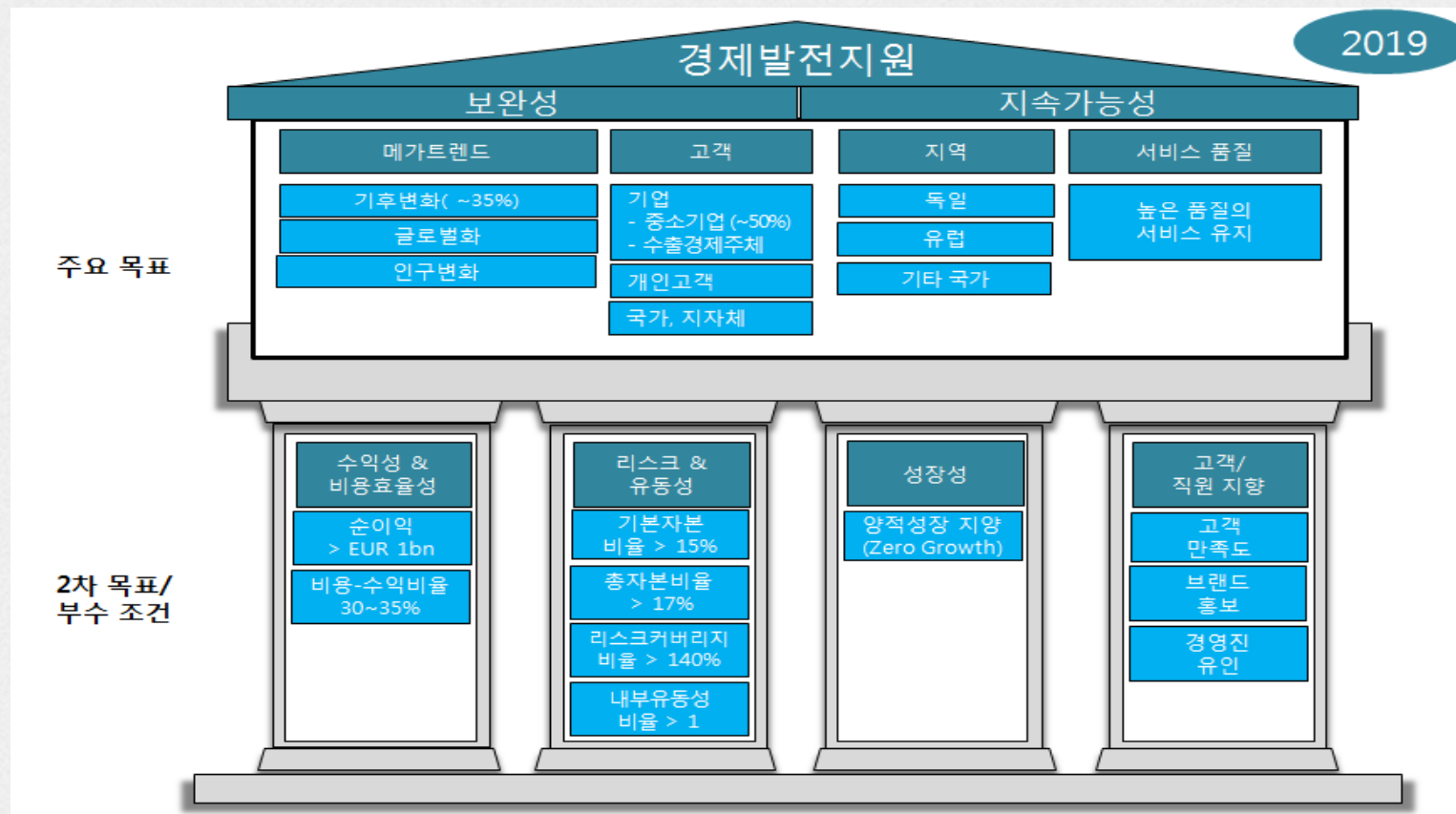


### 목표 : 효율적 정책금융체계 수립

정책금융 목표·평가체계의 확립	기업지배구조 정립	재무적·운영상의 지속가능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하고 지속가능한 목표 (clear and sustainable mandate) 제시</li> <li>■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li> <li>■ 독점형 공기업과는 다른 독립적 평가지침에 따라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주주로서 정부의 역할 재점검</li> <li>■ 정책금융기관의 주주·이사회·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li> <li>■ 임원 및 경영진의 자격요건 마련</li> </ul> <p>* World Bank는 정책금융기관의 독립적 운영을 정책금융설계의 최우선과제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원 발굴 및 전문성 확보 노력 긴요</li> <li>■ 상업금융기관 대비 더 높은 리스크관리능력 필요,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건전성 유지 병행</li> <li>■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세부적 운영에는 자율성 부여, 경영평가 등을 통해 방만경영 규율</li> <li>■ 전문성, 윤리·도덕성을 갖춘 인력과 정책금융 전반의 설계·운영을 위한 리서치능력 확보</li> </ul>

### 목표·평가체계 확립 : KfW의 장기전략 체제 사례

- ◆ 메가트렌드, 고객, 지역 등과 관련된 주요 목표와 수익성, 리스크, 성장성 등과 관련된 2차 목표로 구성되는 장기 전략 framework 수립



자료: KfW

### 지속가능성 확보 : 리스크 관리역량

#### ◆ 리스크문화(Risk Culture) 정립 및 정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금융 전반의 리스크관리체계 확립 필요

- 궁극적으로 정책금융기관과 정부는 일관된 리스크관리 원칙하에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별하고, 그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 은행 기업지배구조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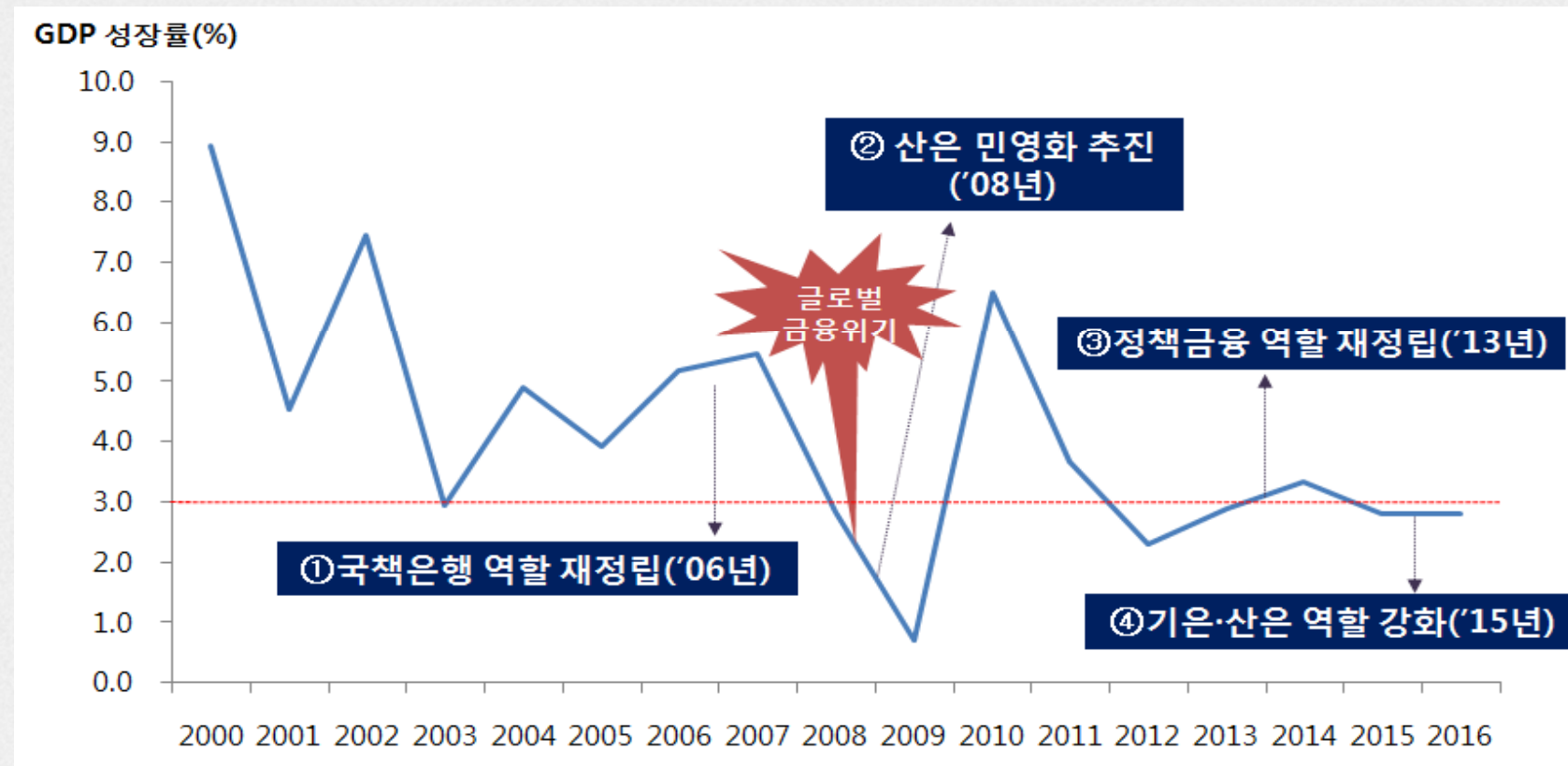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1] 이사회에의 전반적인 책임</li> <li>▸ [원칙2] 이사회 자격 및 구성</li> <li>▸ [원칙3] 이사회에의 구조 및 업무 관행</li> <li>▸ [원칙4] 고위 경영진</li> <li>▸ [원칙5] 그룹 체제에의 지배구조</li> <li>▸ [원칙6] 위험 관리 기능</li> <li>▸ [원칙7] 위험 식별, 감시, 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8] 위험에 대한 의사소통</li> <li>▸ [원칙 9] 준법감시</li> <li>▸ [원칙10] 내부 감사</li> <li>▸ [원칙11] 보상</li> <li>▸ [원칙12] 공개 및 투명성</li> <li>▸ [원칙13] 감독자의 역할</li> </ul>
---	---

주: 위험관리는 주로 원칙 6~8에서 다루고 있으며, 상기 원칙은 정책금융기관(state-owned or state-supported banks)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  
 자료: BIS(2015)



### 기존의 정책금융체계 개편 논의

◆ 과거 10년간 크게 4차례에 걸쳐 정책금융체계 개편이 논의되었으나 큰 진전을 거두지 못함



향후에는 현 정책금융체계의 역사적 맥락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 정책금융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과제 ②

## IV. 미래 정책금융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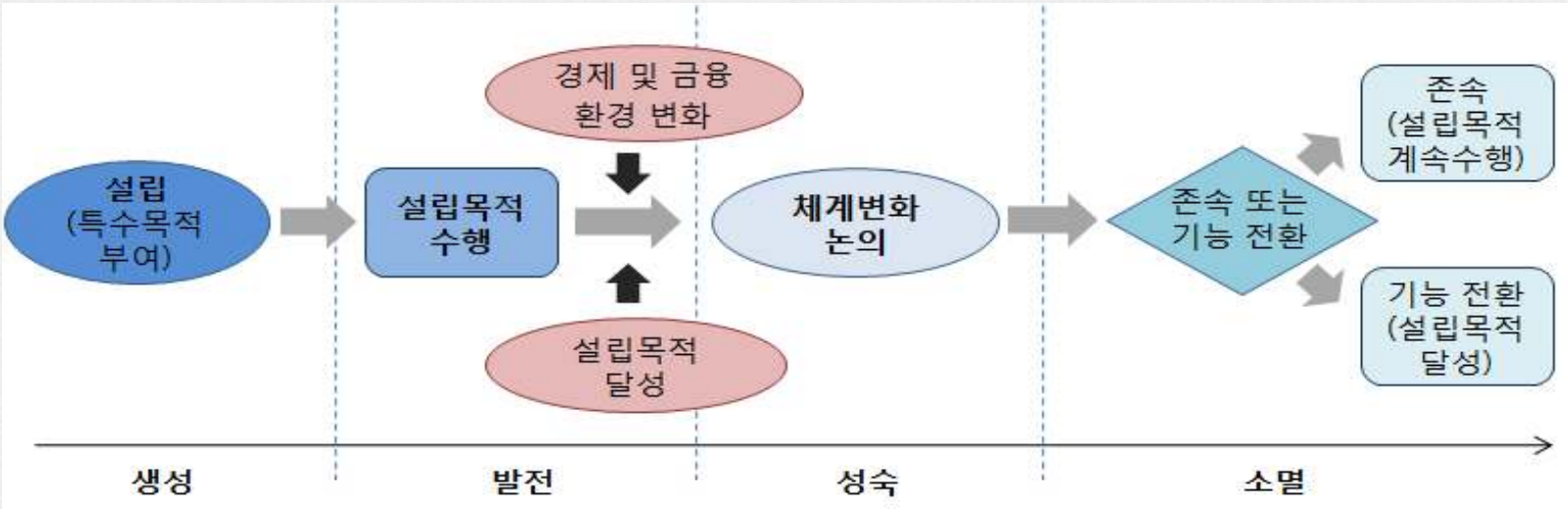
### 정책금융체계 개편의 방향성

#### ◆ 정례적인 정책금융체계 개편 논의 필요

- 정책금융체계 개편의 논의·추진은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곤란
- 정책금융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5~10년 단위로 정책금융체계 전반에 대한 리뷰 및 개편 논의 필요

#### ◆ 정책금융기관 기능전환 검토

- 정책금융기관 역시 민간은행과 동일하게「생성→발전→성숙→소멸」의 발전과정을 거침
- 당초 설립취지 달성 또는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의 존속/기능전환 필요성 검토



자료: 김영식(2015)

# <참고> 정책금융체계 개편에 대한 기존논의

## IV. 미래 정책금융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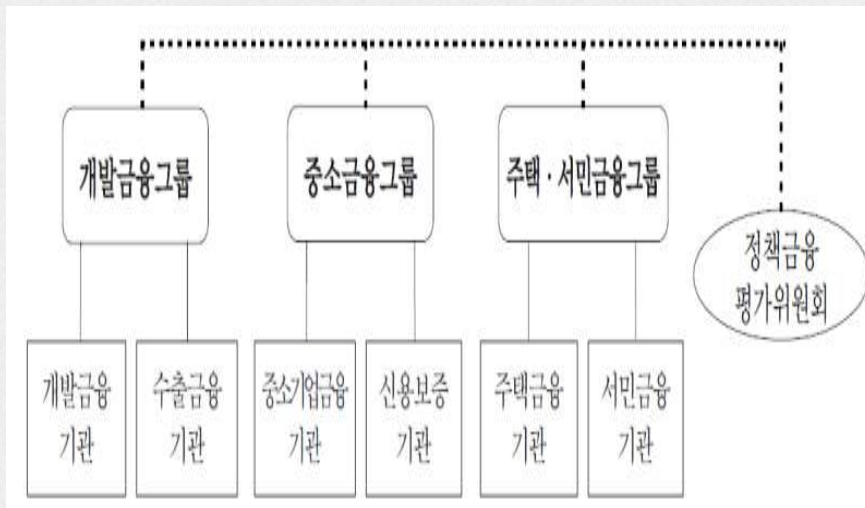
### ① 효율화 추구형

- 현행 정책금융체계를 유지하되, 정책금융평가협의회를 설치하고 정책금융 기관별로 상이한 정부 주무부처를 단일화하여 정책금융 공급체계 효율화 추구

### ② 기능별통합형

- 정책금융기관들을 성격에 따라 기능별로 재편·통합하여 중복지원 문제를 최소화하고, 정책금융평가협의회 설치 및 정부 주무부처 단일화를 통해 정책금융 분야별 효율성 제고

#### <그룹별 통합화(안)>



#### <기능별통합형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기능 상당부분 해소로 정책 금융 공급채널 효율화에 유리</li> <li>▶ 유사기능 소그룹화에 따른 동질성 유지</li> <li>▶ 소그룹화 방식 통합에 따른 조직 마찰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기능 잔존 가능성 존재</li> <li>▶ 정책 금융 기관 일원화에 따른 기업의 정책자금 가용성 및 접근성 위축 우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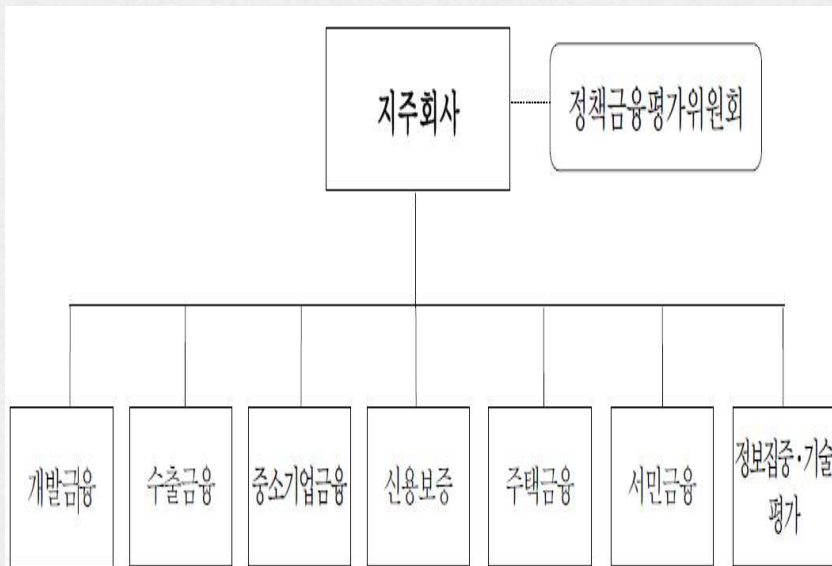
# <참고> 정책금융체계 개편에 대한 기존논의

## IV. 미래 정책금융의 설계

### ③ 완전통합형 (정책금융지주 회사형)

- 정책금융기관들을 정책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여 정책금융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한층 제고하고 경제정책,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 <정책금융지주회사(안)>



#### <완전통합형(정책금융지주회사형)의 장단점 분석>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중복 해소 등 정책금융 공급 채널 효율화에 유리</li> <li>▶기관간 역할·업무범위 설정 유리</li> <li>▶기관간 협업 및 일원화된 창구를 통한 One-stop-service 제공</li> <li>▶공공성과 상업성 분리에도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대형·중앙집중형 정책금융기관 탄생으로 정부개입의 폐해 및 편중 리스크 확대(재정부담 초래) 가능성</li> <li>▶자금수요자의 정책자금 가용성 및 접근성 위축 우려</li> <li>▶상업금융 발전에 따른 업무축소 가능성</li> </ul>